
제2장

2004년 사업의 총괄적 평가

2004년 재단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과 정체성 확립이라는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연구개발과 평가를 통한 문화행정·지원체계 확립, 예술창작의 실질적 기반조성과 자생력 제고, 지역 문화예술 아마추어리즘 육성, 문화교육과 체험을 통한 문화기본권 신장,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한 축제 개발을 주요 '업무목표'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3년도의 면밀한 사업평가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2004년 재단의 기본 정책방향을 '순수 기초예술의 진흥', '문화향수 활동 확대', '문화정체성 확립'으로 정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좌)2004 기전아트페어
(우)실학축전 경기_2004

또한, 일부 제기되어온 관행적이고 소극적인 문예진흥사업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최초의 문화재단이라는 선도적인 위치에서 실질적인 예술 창작의 여건과 지원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다원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평가 환류의 정착으로 지역문화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순수기초예술 진흥'과 관련하여, 도내 예술인들의 창작공간의 부족과 순수예술의 창작기피에 따른 작품 수준의 저하로 수요자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재단은 건강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 생산자를 위한 일련의 새로운 시범 정책들을 운영하였다. 재단이 관심을 가져야 할 '기초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점은 예술의 창작→매개→수요와 같은 예술의 선 순환적 과정에 있어서 '창작'과 '매개' 그리고 '수요'의 유기적이고도 원활한 소통방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흔히 대중예술과 대비되고 있는 '기초예술' 진영은 시장논리의 자본주의적 소통방식을 유지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재단과 같은 공적기금을 담보하고 있는 기관이 예술의 공공성을 담보로 다양한 지원방법 중에 하나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



(좌)문화예술 창작촌「창문 아트센터」
(우)소극장 동선아트홀
「NQ가 살아있는 연극모음 페스티벌」

2004년 재단은 문화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예술 창작촌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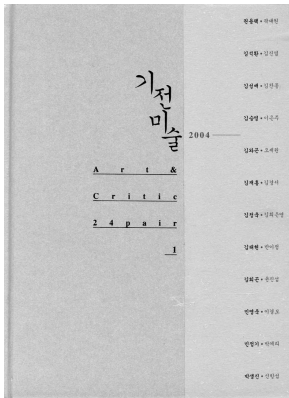
트]사업과 점차 자생적 기반을 상실하고 있는 미술, 문학 장르의 활성화를 위해 「기전 아트페어 운영」, 「경기문학활성화사업」등을 야심차게 기획하여 새롭게 추진하였다. 또한 일반공모지원사업에 ‘공공·실험예술’ 분야를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예술창작 여건을 조성하고 기초예술의 진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정책 시도를 펼쳤다.

둘째, ‘문화향수 활동 확대’와 관련하여, 재단은 기존의 단순한 감상자에 머물렀던 수용자 층을 생산적 참여자로 전환하는, 이른바 문화생비자(Prosumer)로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다각적인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였다. 지난해 재단 공모지원사업의 특성을 새로이 반영한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문화의 최종소비자가 되는 도민들이 다양하게 재단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재단 목표 중에 하나로 두고 있는 ‘생산적 참여’의 실례를 만들었다.

도내 소극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이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지역문화공간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원 축을 이동하였고, 기전문화대학에서는 이러한 도내 공공문화공간의 기획운영 프로그램을 지역협력단체와 공동 연구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2004년에는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자발적인 ‘청소년’ 문화예술동아리 네트워크 지원과 더불어 최근 새로운 창작 유통매체로 관심을 끌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문화예술 동호회 운영시스템(블로그)을 개발하였다. 이 밖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도내 ‘이주노동자’를 위한 한국 문화체험과 교류 행사, 사회복지시설과 문화예술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문화제’ 등 도내 각계각층의 문화소의 계층 및 지역을 위한 문화예술 향수와 참여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셋째, 그 동안 경기도의 정신적 문화로 매우 소중한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효'와 '실학'을 제외하고는 경기도의 문화적 자산에 대한 기초연구와 조사활동이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재단은 경기도의 유구한 전통문화를 오늘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당대의 정서와 높은 차원에서 결합하려는 지적연구와 성찰을 통해 '경기도 문화정체성' 확립에 노력을 기울였다.



(좌)기전미술 2004
(우)제6회 경기민요경창대회

지난해에는 경기도의 정체성과 정신자산을 체계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학연구소'의 설립타당성과 운영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경기도의 성곽', '기백열전'에 이어 '기전미술 2004' 발간 등 경기도의 문화·역사적 학술가치가 있는 연구 성과를 「기전문화예술총서」시리즈로 발간하고 있다.

국가나 경기도가 지정한 '무형문화재'의 공연, 전시에 대한 지원과 이를 후세에 영구히 보존하여 전승할 수 있도록 하는 영상물 제작을 통하여 문화재의 보존은 물론 현대적으로 계승·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경기민요반'의 발전적 연장 축인 '경기민요 육성지정학교' 운영과 '경기민요경창대회', '경기농악경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경기도만이 갖고 있는 전통 생활문화를 현대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하였다.

유형문화자산 보존정책으로 기전문화재연구원을 통한 도내 문화유적 학술조사를 실시하여 발굴된 유물은 재단 내 「유물보존과학팀」을 통해 과학적으로 보존처리하고 있다. 특히 2004년에는 경기도내 시·군의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조사와 목록화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경기도 시·군의 성장과정과 공간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서 활용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21세기 문화예술정책의 주요한 화두로 거론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재단은 이미 2001년에 부설기구로 ‘기전문화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극놀이연구소 사다리, 연극놀이 <알>

대학은 기존의 제도권 교육에서 감당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학교 밖의 학교’로 대안적인 교육을 문화 예술적 영역 내에서 구현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2004년에는 문화예술 교육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기존 교양교육과정(다님길)은 프로그램과 개설지역을 확대하였고, 전문교육과정(난달)은 교육대상별로 과정을 세분화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였다.

대학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수립을 위한 주요 모델로 간주되어 지속적인 협력요청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재단은 1997년 설립 이후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일반적인 문화예술 지원 배분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과 정책개발을 통해 나름대로 지원사업의 내실화와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실질적 예술창작 여건기반 조성, 수동적 지원 정책에서 적극적인 참여 예술정책 시도, 계층·지역 간 문화향수 불균형 해소 노력, 새로운 창작방식의 반영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모니터링이라는 문화예술정책의 당면과제의 연구개발을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수 없는 주민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획과 지원정책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겼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재단이 2004년도에 의욕적으로 펼친 ‘기초예술’ 진흥사업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창작환경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타인지 육성하고 지원할 신진 예술인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단 ‘공모지원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인 희곡, 작곡, 안무에 있어 기본적인 지원대상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문화예술인 창작촌 프로젝트’의 경우 컨테이너 박스, 비닐하우스 등의 문화공간은 임의 건축물로 분류되어 지자체의 단속대상이 되는 등 주민생활형 문화기반시설을 지향하는 창작공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전아트페어’의 경우 경기도 지역 미술계 전반에 대한 기초정보와 자료의 부재로 지역 유망작가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았고, 지역 미술작가의 작품 판로를 개척한다는 의미의 미술견본시장의 주요 소비대상으로 일반인을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다. ‘장애인 예술 활동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도 기존 단체의 일회성 사업지원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 장애인이 함께 예술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당연한 일원임을 서로 자각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그 동안 관심 밖에 두었던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예술그룹을 발굴하여 육성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

심한 기획이 아쉽기도 했다.

장르별 예산배분에 있어서도 다소간의 형평성 논란을 빚기도 했다. 특정 장르에 있어서는 심사위원들의 형식적인 지원안배와 지원양상이 실제로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도 단위 연례예술행사 지원에 있어 각 급의 예술단체간 지원액 차이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단은 이러한 장르별, 단체별 지원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당초의 지원절차와 규모에 맞게 지원금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간섭’이 아니라 합리적 검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재단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창작물에 대한 내용적 모니터링 역시 각 급의 다양한 제도를 통하여 충실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상호긴장과 비판적 참여가 전제되지 않은 지원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소액다건의 폐해를 답습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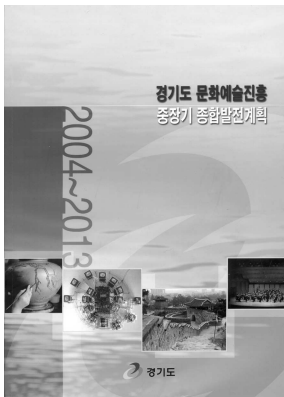
또한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심사위원의 선정과 심사제도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명망성이나 장르적, 특히 지역적 안배로 심사위원을 구성하기보다는 상호 토론과 비판이 가능한 적극적인 심사위원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여타 장르와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완성도와 취지를 구현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연차 지원책을 도입하고, 아울러 급변하는 문화예술환경에 따른 신규 유형의 문화예술 작업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더불어 장르 특성에 알맞은 정책연구와 안정적 제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창작물을 발표한 지면이나 공간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작의 동기 부여와 작품 생산의 실제과정에 효과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연구하여 추진할 때 재단은 단순히 지원금을 안배하는

조직이 아니라 창작자와 함께 고민을 나누면서 그 장르적 상황과 한계를 공동으로 대처해 가는 생산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2004년~2013년까지 10년간의 「경기도 문화예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내일을 여는 새로운 문화중심 경기’라는 정책적 비전하에 1) 권역별 문화발전 2) 문화유산의 현대화와 실용화 3) 문화적 삶이 있는 문화환경 조성 4) 예술지원을 통한 창조력 신장 5) 첨단문화사업육성과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6) 경기문화가 돋보이는 관광상품 개발 등 6개 부문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경기도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급변하는 미래의 환경 속에서 동북아 중심지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미를 두고 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특히 경기도 권역별 문화발전계획을 마련하여 「북부지역」은 ‘평화·생태문화’의 지역으로 조성하여 ① 국제평화도시 조성(20세기 평화박물관 포함) ② 남북문화교류센터 유치 ③ 테마파크 조성 ④ 자연다큐멘터리 필름페스티벌 개최를, 「동부지역」은 ‘여가·관광문화’의 지역으로 ① 도자연구단지 설립 ② 가족단위 문화예술 캠프 조성 ③ 예술인촌 조성을, 「서부지역」은 ‘국제문화교류’의 지역으로 ①

외국인노동자 문화체육축제 ② 국제문화의 거리 조성 ③ 경기국제문화교류센터 설립을, 「남부지역」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역으로 ① 문화재과학산업연구소 건립 ② 문화교육도시 선정 ③ 호·실학교육 활성화 조성 ④ 대안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⑤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 운영(MIT 미디어랩 유치)을 핵심전략사업으로 제시하여 보다 지역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문화예술이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발전을 선도하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문화현상과 욕구를 파악하고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계획서는 궁극적으로 도민들의 문화적 기본권과 창의성을 증진시켜 도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본 방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재단이 중장기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지역쾌적성의 추구 등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재단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경기도중장기발전계획'은 창작여건 개선을 통한 예술 활동 활성화 부문과 연계하여 재단의 기능 및 지원체계 개선을 제시하였는데, 중앙의 문예진흥원이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경기도문화예술위원회와 문화재단의 통합을 통하여 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재단의 위상을 재정립하여 지원정책의 결정, 지원금의 배분 등 거시적인 역할은 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실제 지원결정 및 평가는 재단 및 소위원회 등에서 담당하도록 제도화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문화의전당, 도립미술관, 도립박물관 등 대표적이고 규모가 큰 문화시설은 별도의 운영기구를 설립하고, 소규모 문화시설은 재단에서 통합적인 운영을 통하여 인력의 통합적 운영과 전문성·동기 제고, 프로그램의 개발 활용, 통합적 마케팅을 통하여 주민서비스 및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였다.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재단 부설 기전문화대학은 경기북부지역 등 소외된 지역들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거점 지역 교육시설을 확대하고, 기타 지역에

는 문화의 집, 문화기반시설 등에 각종 프로그램을 공급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재단의 재정과 관련하여 최근 이자수익률의 저하로 인해 중앙 문예진흥기금 조성운용정책이 적립 위주에서 매년 필요경비를 보조하는 정책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추어, 재단도 적립금 확충정책에서 매년 필요경비를 보조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대신 영국의 ACE의 사례처럼 중단기 재정계획을 토대로 재단의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앞으로 재단은 기존의 전문성과 역량을 새롭게 재편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문화관광정책연구원의 정광열 연구원은 경기도와의 관계 속에서 다음과 같이 재단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였는데, 재단은 후술할 중·단기발전계획서인 「전망2010」 속에 이를 수용하였다. 이를 인용하는 것을 끝으로 본 장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분도가 거론되고 있을 만큼 지역적으로 편차가 크고(전체를 포괄하는 접근성이 낮고) 경기도를 상징하는 정체성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통합성이 낮은 상황에서 중장기 계획에서 제안하고 있는 권역별 접근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재단에서도 조직과 사업에서 권역별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존에도 권역별 접근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분석이나 지원금 배분에서 주로 이루어졌을 뿐 전략적인 차원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권역별 특성에 따른 전략적 지원과 육성, 권역별 네트워크와 타 권역과의 교류, 문화교육, 거점 문화시설 육성과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권역별 특색 있는 예술축제의 개발 육성 등 전반적인 차원에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단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문화지형과 생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문화저변에 대한 조사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변화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하므로 중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작업이다.

둘째, 경기도가 가진 역량과 포지셔닝을 고려하여 중장기발전계획에서는 외국 및 북한 등과의 교류를 역점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재단의 자체평가대로 국제문화교류 사업 및 역량은 초기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므로 이를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국제교류 및 북한과의 교류는 중장기적인 기획과 추진이 필요한 만큼 이 부문에 조직의 목표, 자원과 조직역량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핵심전략사업으로 제시한 북부지역 평화·생태문화중심지역 조성에서 경기문화재단의 역할 모색이다. 이러한 사업은 해당 지역사회, 지자체 및 문화예술계 등이 주체가 되어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방식을 띠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잘못하면 지역개발사업이나 하드웨어 조성에 그치게 되거나 해당 지역에만 국한되고 다른 지역의 참여가 배제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단에서 추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문화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소프트웨어-하드웨어-휴먼웨어가 조화되며, 다른 지역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프로그램 부문과 도시문화환경 부문에서 재단의 역할증대가 필요하다.

넷째, 중장기 계획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소규모 문화시설을 다수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성 조사와 운영에 대한 전문적 지원 또는 위탁운영에서 재단의 역할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시설은 순수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부담이 적기는 하지만, 민간의 경쟁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우리나라 여건에서 중기적으로는 문화재단 같은 전문성을 갖춘 공공조직에서 프로그램 개발 보급, 전략적 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과 연계하여 운영하게 되면 전문성, 공공성,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문화시설의 재단법인화에 대한 대안으로 재단에 의한 위탁운영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중장기 계획에서 제시한 주요 재정사업에서 경기도-지사체-민간-재단 간 누가 주체가 되고,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계획은 관련 기관간의 합의와 실행계획 수립시 결정되어야 하지만, 재단 차원에서 개별 사업에 대한 역할 한계에 대한 의견과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사업에 대한 평가제도의 강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또는 성과관리제도 등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피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의 효율성에 대한 요구가 강하고, 재정의 한계에 따라 점점 더 자원배분의 가치판단에 대한 과학적 근거,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사업들에 대한 단계별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이에 대해 평가하고,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경기도에서는 거시적인 프로그램이나 재단 자체의 운영, 전략목표에 대한 평가에 국한하고, 각 부문별 성과목표에 대한 평가는 재단에서 수행하도록 하며, 이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